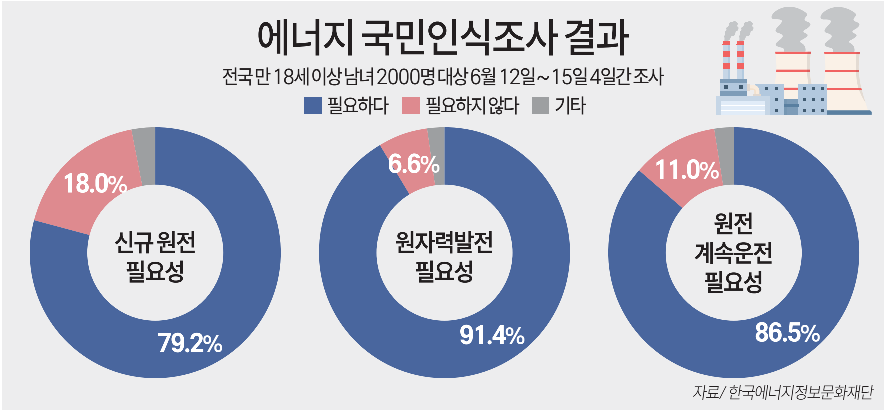
국민 79%, 신규 원전 건설 공감…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식조사 결과
원전 전력수급계획 반영 83% 공감
지역 인근 건설 찬성 56%, 과반 넘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이를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전 정책 결정과 지역 수용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3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15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2026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조사원 면접전화조사(CATI)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2.9%에 달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긍정했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86.5%)과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71.2%)에 대해서도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표가 집계됐다. 원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83.8%)과 원전 수출 확대 필요성(88.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자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 입지에 대한 지역 수용성도 점진적인 개선세를 나타냈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56.3%로 과반을 넘겼다. 다만 전체 원전 필요성(91.4%)이나 신규 건설 필요성(79.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해, 입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전 정책의 절대적 기준은 '안전'이었다. 원자력 정책 결정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응답자의 42.2%가 '원전의 안전성'을 선택해 전력공급 안정성(17.7%), 환경·생태계 영향(14.5%) 등을 크게 앞섰다. 원자력 분야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역시 '원전 안전성 확보'(28.3%)가 1위로 꼽혔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17.9%)가 뒤를 이었다.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도 '안전성 강화'(48.3%)가 가장 많았고, 이어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통'(18.1%),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14.0%), 지역 주민 지원 확대(11.0%) 순이었다.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인지도 간 격차'가 뚜렷하게 관측됐다. SMR 개발 및 활용 필요성에는 86.8%가 동의했으나, SMR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7%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력발전 확대가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3.8%로 나타났고, 원전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8.7%로 국민 다수는 원전 산업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해외 원전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원자력 기술 경쟁력 강화'(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SMR 등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와 데이터,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분기별로 에너지 테마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1분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2.0%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이어 3분기에는 탄소중립·전력망, 4분기에는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원전, '전력수요 폭증' 美 시장 공략

KNA, 한·미 원전 협력 세미나 개최
국내 원전 기업의 전주기 역량 소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AI 산업 성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미국 시장에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공급망 진출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KN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한-미 원전산업 협력 세미나(KORUS Nuclear Industry Partnership Seminar)'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미 최대 원자력 행사인 'NECX 2026' 기간 중 열렸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한-미 원전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KNA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미국의 주요 원전 사업자, 엔지니어링사, 주정부 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발표 세션에서는 원전 프로젝트 관리부터 설계·엔지니어링, 주기기 제조, 정비, 핵연료, 사이버보안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 역량과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종합적으로 소개됐다.

미국 측 연사로 나선 글렌 데이비스 전 버지니아주 에너지부 국장과 칼 코 전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 비서실장 등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풍부한 건설 경험과 탄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원전 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KN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미국 원전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원전 기업들의 미국 프로젝트 및 공급망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글로벌 3대 크루즈 선사 부산항 집결

부산항만공사, 내년 127항차 입항

부산항만공사가 3대 국제 크루즈 선사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부산 기항 노선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공사는 이달 하순 미국 마이애미를 찾아, MSC크루즈 미주법인, 로얄캐리비안그룹, 노르웨이지안크루즈라인홀딩스 관계자들과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입항 확대, 준모항·모항 활성화, 크루즈터미널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을 통해 총 127항차의 입항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87항차보다 40항차(46%) 증가한 규모다.

MSC크루즈는 올해 23항차에서 내년 37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늘린다. 특히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익스플로라 저니'(Explora Journeys)를 부산항에 신규 유치하고 기존 'MSC 벨리시마'(Bellissima)호 등의 럭셔리 크루즈의 입항을 추진한다.

로얄캐리비안도 올해 54항차에서 내년 74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확대한다. 특히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실버씨'(Silversea)는 11항차에서 26항차로 크게 증가하며 올해 없었던 부산 오버나잇 일정도 2027년 3항차를 신규로 도입한다.

노르웨이지안크루즈라인도 2026년 10항차에서 2027년 16항차로 확대한다.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통해 부산 오버나잇을 실시한 그룹 내 '오세아니아 크루즈;(Oceania Cruises)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내 프리미엄·럭셔리 브랜드의 항공·철도 연계 신규 상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사는 MSC크루즈 미주법인에서 '셀러브리티 크루즈'(Celebrity Cruises) 사장 및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 의장을 역임한 업계 50년 경력의 릭 사소 MSC Cruises 미주법인 회장과 만났다. 로얄캐리비안 본사에서는 하이메 카스티요 부사장과, 노르웨이지안크루즈 본사에서는 후안 커릴라 수석부사장과 면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후부, 자연자본공시 실무 가이드 배포

국내 기업 대응 역량 확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와 작성을 돕기 위해 맞춤형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오는 10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자연 관련 공시 지침 초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 2종을 오는 31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경영 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자료는 "기존 사례와 결과 위주의 자료만으로는 실제 작성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공시 체계 이해부터 분석,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까지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자본공시 안내서'는 국내외 공시 동향, 주요 지표, 예측 분석, 자연전환계획 수립법 등을 담았다. 함께 배포되는 '리프 실무 해설서'는 표준 분석 절차인 LEAP(위치 파악·진단·평가·대응) 단계별 진행법과 점검표(체크리스트), 해외·업종별 적용 사례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자본공시는 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기업이 국제 공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운용사 선정

삼성자산·미래에셋·우리은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제2기 전담운용기관에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이, 주거래은행에 우리은행이 각각 재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제2기 전담운용기관과 주거래은행 선정을 완료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제2기 사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주거래금융회사는 우리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22년 푸른씨앗 출범부터 공단과 함께 기금을 운용해 왔다. 이번 재선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제2기에도 이어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산업 ODA로 기업 해외진출 지원

KIAT 업무 코트라로 이관

산업통상부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산업 ODA)' 관리기관이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 이관된다.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31일자로 KIAT와 코트라 간 '산업 ODA 업무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코트라가 산업 ODA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86개국 132개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의 해외 현장 밀착형 지원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돕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2012년부터 35개국에 총 5931억 원(103개 과제)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은 312억 원 규모다. 그간 사업을 통해 약 2280억 원의 국산 기자재 수출과 센터 운영을 통한 2330억 원 규모의 후속 수출 성과를 거뒀다.

코트라는 기존에 관리해 오던 재정경제부의 ODA 사업(KSP, EIPP)에 더해 산업 ODA까지 연계·운영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